

내일 수능 ... 간절한 엄마의 기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두 손 모아 기도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수영대회, 광주만의 행사인가...

송연석 기재부 2차관 “정부 지원 불가”... 개최 불투명 대회 반납 등 최악의 상황 땀 국가 신인도 하락 불가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세계수영대회)가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으로 인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세계수영대회의 지원 근거가 되는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은 사실상 ‘호남 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갑) 의원 등에 따르면 전남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송연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의 세계수영대회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세계수영대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따지지 송 차관이 ‘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문서 위조로 유치한 국제경기대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지원 불가 이유를 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회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 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는 알려졌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위조 논란은 4월에 있었고, 곧바로 시정대 유치신청서 중간본과 최종본에는 정부 보증서 원본을 제출해 유치한 대회로, 위조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에 세계수영대회를 명시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



남부대 국제수영장

화했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내년 수영대회 조차위 출연금과 운영비 등으로 46억원의 국비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시는 이와 함께 46억원 이외에 2017년 43억원, 2018년 88억원, 대회가 개최되는 2019년 101억원 등 총 27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가 이날 공식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광주시의 선택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양정환 광주시장이 언급한 대회 반납 등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국제대회 성격상 대회 반납도 여의치 않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비용은 계약금 22억원과 개최권료 54억원 등 총 76억원이며, 앞으로 36억원의 개최권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 만큼 대회를 포기하면 위약금 55억원에,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과 개최권료, 그동안 쓴 유치활동비(38억원) 등 모두 213억원의 시민혈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나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명성 추락도 큰 손실이다.

박혜자 의원은 “대회 반납시 위약금, 국가 신인도 문제 등 후유증이 적지 않다”면서 “기재부가 호락호락하지 않겠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 내용과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대회를 개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의석 수를 지켜라”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 D-2

영호남 동수 감축 땀 위상 약화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을 앞두고 호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지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막판 담판에 나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떠한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 불가 원칙 등의 이유로 호남지역 의석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호남 민심이반은 더욱 커지면서 내년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대표와 원내수석, 원내수석부대표, 정계특위 여야 간사는 10일 ‘4+4 심야 회동’을 갖고 선거구 확정 문제에 대한 담판에 나섰다. 이번

회동에선 오는 13일까지인 선거구 확정안 법정처리시한 내에 본회의 통과를 위한 선거구 확정 기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여야의 막판 협상을 놓고 지역 민심의 우려는 크다.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및 고수를 놓고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영·호남 동수의 의석수 감소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남의 의석수는 67석, 호남의 의석수가 30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호남 동수의 의석수 감소는 호남 정치권의 위상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고수라는 원칙에 얽매이기 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남 7천억 퍼주고... 호남·충청 2천억 줄이고”

기재부 SOC예산 지역차별

기획재정부가 최종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SOC예산이 영남의 경우 국토교통부안보다 7000억여원이 늘어난 반면 호남과 충청은 569억원과 1391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정지역 편중 예산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10일 분석한 정부의 내년도 SOC예산 증감 현황에 따르면, 영남지역에서는 애초 국토부가 반영 요청한 SOC예산액수보다 7015억여원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 예산만 626억1700만원 줄어든다고 대구(3064억9000만원), 경북

(2528억7600만원), 부산(1413억8000만원), 울산(633억4300만원)은 모두 대폭 늘어났다. 정부예산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올린 예산안을 기재부가 최종 심의에서 상당 부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 의원은 “영남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출마 가능성이 큰 곳인데 이들 지역만 7000억원 가량이 증가, 총선용 예산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역 내년도 SOC예산의 경우, 국토부 요청안보다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43억원, 816억원 줄어든다고 광주에서는 390억원 늘어 전체적으로 569억원이 삭감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인권상’ 아용산 수처 총선 압승

미안마 ‘반백년 군부독재’ 끝장낸다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용산 수처 여사가 이끄는 미안마의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무려 90% 이상의 의석을 싸늘이하며 압승을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LD는 미안마 전체 14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상·하원 의석 164석 중 154석(93.9%)을 휩쓸었다.

현재 선출직 상·하원 총 498석 중 164석(33%)의 개표가 완료됐으며, 이런 추세는

나머지 10개 주 개표에서도 비슷하게 이어질 것으로 AP는 내다봤다.

따라서 NLD는 단독 집권의 마지노선인 67% 이상의 선출직 의석을 확보해 53년 만의 군부독재 종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한편, 아용산 수처는 지난 2004년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이끈 공로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04년 제5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